

# 북한의 對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전 현 준(통일연구원)

## ◁ 목 차 ▷

- I. 서 론
- II. 북한의 對서방국가 외교 배경과 목표
- III. 북한과 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 과정
- IV. 북한의 對EU관계 개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
- V. 결 론

## I. 서 론

2001년 5월 14일 유럽연합(EU)이 대북수교 결정을 함으로써 북한은 EU 15개국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의 연쇄적인 수교와 함께 對유럽외교의 大尾를 장식하였다. 북한이 서유럽국가와 수교를 시작한 시기는 스웨덴을 비롯한 9개국과 수교했던 197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북한이 서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한 이유는 '세계혁명력량과의 연대성 강화'라는 측면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차관도입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차관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모순외에 세계적인 유가파동으로 인해 실패하고 '채무불이행 국가'로 낙인찍히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북한이 자본주의국가와의 거래나 '자본주의화' 학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김일성이 '외화벌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이었다.<sup>1)</sup>

1) 김일성은 "가공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 나라의 현조건에서 기계설비를 사오는데

가공공업 발전에 필요한 외화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국가들에 금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의도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무산되었다. 미국이 1950년 6월 28일 대북 '수출통제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sup>2)</sup> 이후 자본주의국가들의 북한과의 교역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경제는 완만한 형태를 띠기는 하였지만 침체가 지속되었다. 결국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자력갱생로선' 채택에 있지만 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의 최종 '은신처'를 파괴해 버렸다. 북한경제는 급전직하로 쇠락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북한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일성 사망, 1995~1997년間に 발생한 자연재해 및 수십만의 아사자 발생은 김정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sup>3)</sup>이라는 배수진을 치도록 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경제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1997년부터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자본주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1997년 이후 북한은 자본주의경제 연구를 위해 담당관료들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

---

필요한 외화문제를 해결하자면 유색금속생산을 늘여 그것을 수출하는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시장에서 유색금속, 특히 금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금을 많이 캐서 자본주의시장에 내다팔면 기계설비를 사오는데 필요한 외화를 얼마든지 벌수 있습니다. 금을 캐서 팔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두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기전에 금을 많이 캐서 팔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유색금속광산부문일군들의 과업(중요유색금속광산지배인및모범로동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2월 21일),"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93.

- 2)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국신, 『클린턴행정부와 의회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23 참조.
- 3) '고난의 행군'은 1939년 김일성이 일본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하면서 사용된 구호였으나 김정일이 1995년 대홍수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자 주민을 통합하기 위해 199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재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1998년부터 '사회주의강행군'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4)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과 신진엘리트," 『김정일체제의 지속과 변화』 (고려대학교북한학연구소 창립 3주년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5. 4), pp. 12~15 참조.

류하고는 있었지만 미국은 북한을 '책임있는 세계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자본주의화습을 묵인하였다.

경제난 극복이 체제생존에 필수적임을 인식한 김정일은 1998년 8월 22일 '강성대국'론<sup>5)</sup>을 제시하고 '경제강국' 건설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였다. 김정일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1970년대 중반이후 소원해졌던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다. 1999년 9월 백남순 외무상은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UN에서 서방국가 외무장관 및 차관들과 수교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다.<sup>6)</sup> 물론 그 배경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사일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우회통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對EU와의 관계개선 노력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필두로 금년 5월 14일 EU의 대북 수교결정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북한과 EU간의 수교는 지속되었고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의 남북한 중재 역할로 인해 EU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세계혁명력량과의 연대성 강화' 전략의 성공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인가? 북한과 EU와의 관계개선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미국은 EU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를 좌시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 답하기 위해 북한이 EU와 관계개선을 서두른 배경이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북한-EU관계가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5) 이에 대한 북한측의 자세한 설명은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참조.

6)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1999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54차 UN 총회에 참석, 20여개국의 대표와 회동했는데, 유럽지역의 덴마크·이탈리아 외무장관 및 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노르웨이 외무차관과 회담하였다. 『연합뉴스』, 1999. 9. 29.

## II. 북한의 對서방국가 외교 배경과 목표

### 1. 자주외교 확대

북한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중공, 이집트 등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모인 29개국이 중립주의와 비동맹 문제를 토의한 소위 '반둥회의'를 기점으로 대외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배경에는 물론 1953년 스탈린 사망으로 사회주의권내의 국제적 세력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안전판을 마련하고자하는 김일성의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 이것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에 발표한 '사상에서의 주체'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은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에 대한 경계도 많이 하였다.<sup>7)</sup> 그 이유는 스탈린 비판 운동의 북한내 침투를 우려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김일성의 우려는 1956년 '8월종파사건'으로 현실화되었다.

한편 외교대상의 확대방침은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희미하게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김일성은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국가들의 평화에 호적대외정책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체계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 평화적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강화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우리당은 앞으로…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사이의 평화적공존에 대한 레닌적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권에 립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에 호국가들과의 정치적연계와 실무적연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

7) 김일성은 “쏘련의 형식과 방법을 기계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투쟁경험과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박영빈의 '평화공존론'을 극한적으로 공격하였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저작집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75~478.

니다”<sup>8)</sup>

이후 북한은 소련·중국 및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진영외교’로부터 탈피, ‘인민외교적’ 차원의 외교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전까지는 서유럽의 공산당에만 관심<sup>9)</sup>이 있었던 북한은 1957년부터 서유럽국가 자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 당국제부 산하에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창설하였고, 1958년 아프리카의 중립국인 알제리아와 기니 2개국과 수교하였다. 이와 함께 1950년대말이나 1960년대 초부터 북한은 서유럽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 각종 공업제품과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차원에서 영국, 스웨덴, 서독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기에 무역관계는 더욱 촉진되어 60년대말경에는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 북한의 민간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다.<sup>10)</sup>

북한이 대내·외정책 수립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하게된 주요요인은 한국전쟁에서의 쓰라린 경험, 전후 독재정권 강화 필요성,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원조의 감소, 對중·소 균형외교 필요성 등 때문이었다.<sup>11)</sup> 물론 북한이 주체를 강조했다고 해서 소련과 중국을 경원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중심의 강대국 의존외교는 결국 강대국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김일성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 따라서 그는 제3세계에 대한 외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동시에<sup>12)</sup> 상대적으로 패권주의가 약한 서유럽국가들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1956년 4월 23일),” 『김일성저작집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82~183.

9) 김일성은 1948년 제2차 당대회에서 “서구라파 여러나라의 공산당들은 로동계급과 전체근로인민의 혁명투쟁을 평도하는 강력한 정당으로 되었으며 서구라파민주력량의 선봉으로 되었습니”라고 평가하였다.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48년 3월 28일),”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02

10) 박재규, “북한의 대서구정책,” 고병철 외, 『북한외교론』 (서울: 경남대학교동문제연구소, 1977), p. 106; 한중수, “북한의 대유럽정책,” 양성철·강성학,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 306.

11) 정진위, 『북방3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7), pp. 30~31.

12) 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정책은 줄 저, 『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정책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년 8월) 참조.

물론 1964년에는 소위 '3대혁명력량강화'를 대내외정책 기조로 공표<sup>13)</sup>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서유럽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상 특징은 우선 민간무역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민간친선협회를 결성하고,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을 초청 또는 방문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다음 국교를 맺는 형식을 채택한다. 그 결과 북한은 1971년 말타와의 수교를 필두로 1973년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수교하였고, 1974년에는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와, 1975년에는 포르투갈과 수교하는 개가를 올렸다. 더불어 1975년에는 남한을 제치고 비동맹회의 회원국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교국과의 관계는 원만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서유럽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체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남한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서구로부터의 외채증대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미해결은 채무국과의 마찰을 일으켰고 중국에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였다. 더구나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마약밀매와 밀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1976년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북한 대사관원 전원을 추방하였고, 북한은 핀란드와 스웨덴 북한대사관을 자진 폐쇄시켰다.

서유럽국가들이 북한과 수교한 이유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데탕트 무드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3년 '6.23선언' 발표 등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위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유럽국가들의 정치적 자유분방함도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상한' 행동은 결국 서유럽국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필두로 북한과 EU간에 급류를 타듯이 수교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1970년대 초반처럼 1998년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3)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지(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49.

## 2.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획득

김일성이 '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7년부터였다.<sup>14)</sup>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이 '외화벌이'를 본격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였다. 그 이유는 1949년부터 시작된 '2개년인민경제계획' 완수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서였다.<sup>15)</sup> 김일성은 북한에 매장된 다양한 유색금속 즉, 금이나 아연 등을 팔아 외화를 획득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6·25전쟁중인 1952년에도 외화가 강조되었고, 1953년부터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외화벌이'가 강조되었다. 이후 매년 김일성은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외화벌이'를 위한 김일성의 관심은 당연히 서방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김일성은 1947년부터 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처럼 '대외무역'에 대해서도 1947년부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자본주의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5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북한이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sup>16)</sup>을 수행하는 기간이었다. 1965년에 내린 김일성의 '교시'에는 애절함까지 배어있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 시장 개혁과 시장다변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와의 교역과 자력갱생 노선과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주목된다.

“우리 나라 대외무역에서 주요한 결함의 하나는 사회주의시장에만 진출하고 자본주의시장에는 얼마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오

14) 김일성은 “물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름은 질이 좋기 때문에 외국에 팔면 외화를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외화'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표명하였다. 김일성, “평양곡산공장 노동자들앞에서 한 연설(1947년 4월 19일),” 『김일성저작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27.

15) 김일성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설비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자면 외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금을 많이 캐서 자본주의시장에 내다팔면 기계설비를 사오는데 필요한 외화를 얼마든지 벌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유색금속광산부문일군들의 과업(중요유색금속광산 지배인및모범로동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2월 21일),”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93.

16) 그러나 이 계획은 군사비의 과다지출로 인해 1970년에 끝났다.

직 미제놈들만이 악질적으로 우리 제도를 반대하여 봉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원래 대외무역에서 한두개 나라에만 치우치면 여러가지 폐단을 가져올수 있습니다...대외시장을 넓히며 특히 자본주의시장에 널리 진출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sup>17)</sup>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970년대는 서유럽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형국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경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은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해 제1차 대외개방을 시도하였다. 즉, 서방세계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은 필요한 물품의 수입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외화벌이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오고 있습니다...우리가 자본주의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려면 외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외화가 없이는 자본주의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올수 없습니다.”<sup>18)</sup>

위와 같은 논리에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 개척과 함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부터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15%에 불과했던 對서방무역이 1974년에는 對공산권무역과 거의 같은 42%에 육박하였고, 1975년에는 비공산국가와의 교역이 공산국가와의 교역을 능가하였다.

17)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년 11월 15~17일),”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54~156.

18)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2년 10월 23~26일),”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487~488.



〈표 1〉 북한의 차관도입현황

(단위: 만달러)

연 도	OECD 국
1970년	300
1971년	1,700
1972년	20,400
1973년	37,500
1974년	40,000
1975년	24,300
1976년	-

아울러 김일성은 '6개년계획'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해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사업방법뿐만 아니라 1973년에 이미 금강산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 문제까지 '교시'하였다.

“지금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우리 나라가 지난 시기에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주의시장에도 널리 진출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아직 우리 상품의 질이 높지 못할뿐 아니라 우리의 무역부문일군들이 장사를 잘할줄 모릅니다. 우리 나라에 외화원천은 많습니다…우리 나라의 금강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앞으로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더 잘 꾸려야 합니다.”<sup>19)</sup>

김일성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부진을 질타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의존에서 탈피하고 자본주의 시장개척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19) 김일성, “재일 조선상공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제2차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과 한 담화 1973년 11월 19일),”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593~594.

“대의무역과 외화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하였는데 앞으로는 제3세계나라들,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우리에게 필요한 외화를 많이 벌기 위하여서는 제3세계시장과 자본주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야 합니다.”<sup>20)</sup>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만 무역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신생독립국가들과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우리는 사회주의시장에 계속 의거하면서 자본주의시장에도 적극 나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사와야 합니다.”<sup>21)</sup>

“우리는 무역에서 일면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시장뿐아니라 자본주의시장과 제3세계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하면 여러가지 좋은 물건들과 원료를 사올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sup>22)</sup>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對자본주의 무역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의 근본적 모순, 국제적인 유가파동, 북한 외화가득 원천인 비철금속의 국제가 하락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었다. 결국 북한은 <표 2>에서 처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채무 불이행(default) 선언’을 하였다.

20) 김일성, “제2차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계획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7월 10~11일),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355.

21)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134~135.

22) 김일성, “올해 농사를 잘 결속지으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6월 22~23일), 『김일성 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215.

〈표 2〉 북한의 對서구 채무현황

(단위: 백만불)

국 별	채무총액
프 랑 스	162
서 독	125
스 웨 덴	130
오스트리아	90
영 국	60
네델란드	70
핀 란 드	19
스 위 스	32
이탈리아	20
덴마크	7
벨 기 에	4

\* 1976년말 현재

한편 1980년대 들어 김일성은 ‘합영법’ 채택이전에 대외무역의 다각화를 강조하였고 특이한 점은 과거와는 달리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환경이 호전되었다는 평가를 내린 점이다. 아마 김일성은 ‘합영법’을 통해 대외개방을 시도하면 자본주의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 같다.

“나는 요즘 우리 나라 대외무역이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주되는 원인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데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그전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시장에 진출하려고 해도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수 없었지만 그런 장애는 많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sup>23)</sup>

23) 김일성,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무역

그러나 북한의 대외 신용도로 하락은 1984년 공표된 ‘합영법’마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은 필수적임을 인식했던 것 같고,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시장 상실 이후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느끼고, 1990년에는 ‘무역제일주의’<sup>24)</sup>를 주장했다. 이후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 서방기업의 대북진출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진선봉특구’ 지정 직전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 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시하는 한편, 합영합작까지 지시하고 죽었다.

“우리는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방법을 고쳐야합니다...지금은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대외무역을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무역을 사회주의적방법으로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변화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며 대외무역에서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sup>25)</sup>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다른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경제 합작과 합영도 하여야 합니다...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합영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 기본목적은 다른 나라의 기술과 자금을 리용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의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에서 기술과 자금을 대게 하고 기업관리는 우리가 하는 방향에서 하여야 하며 될수록 많은 리윤을 얻도록 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sup>26)</sup>

---

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3월 13일), 『김일성 저작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34~236.

- 24) 김일성,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1차회의, 정무원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28일), 『김일성저작집 4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35.
- 25)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일, 26일), 『김일성 저작집 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30~233.
- 26)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년 12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 Ⅲ. 북한과 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 과정

#### 1. 북한의 관료에 대한 자본주의교육 확대

김일성은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자본주의와의 무역을 위해서는 관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현시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자본주의시장을 대상하여 무역을 할수 있는 능력있는 무역일꾼들을 많이 늘이는것입니다...우리는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본주의나라들과 능란하게 무역을 할수 있는 준비된 무역일꾼이 많아야 합니다...가만히 앉아서 합병, 합작 대상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졌다고 걱정이나 하여서는 언제가도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sup>27)</sup>

북한으로서는 사상적 침습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을 서유럽국가로 본 것 같다. 특히 '흡수통일'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던 독일과의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통독직후인 1991년 북한이 독일에 무역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본주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인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 이유는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지원 아래 경제관료들의 시장경제 연수를 시작한 시기가 지난 1997년께 부터였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주로 미국, 호주, 스위스, 태국, 싱가포르, 중국, 헝가리 등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16.

27)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년 12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16.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16.

28) 이하의 사건들은 『연합뉴스』에서 추출한 내용들이다.

지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받은 경제관료는 200여명 정도였다. 1997년 UNDP의 지원하에 최초로 경제관료 15명을 중국 상하이에 파견했고, 동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2명의 관료를 파견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매년 10여명의 북한외교관들이 스위스 '다자협상실습연구소(CASIN)'에서 자본주의 연수를 받고 있다. 1999년에는 UNDP의 지원하에 109명이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방법, 사유재산 개념 등 자본주의 경제교육을 받았다.

한편, 북한시장경제 연수단은 대체로 선진국의 대학이나 정부연구소에서 마련한 시장경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분야 연수단은 연수대상국 정부가 마련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2월에는 '나진선봉특구내 나진기업학교 교원 14명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보내 기업회계, 재정, 경영, 재무관리 등을 익히도록 했다. 1998년 7월에는 경제전문가 27명을 세계적인 금융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중부유럽대학'에 3주간 파견, 국제금융동향을 배우도록 했다.

북한관료 10여명은 1999년 9월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아시아재단'과 미국 뉴욕대학이 공동 후원한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거래 분쟁시 중재방법, 외국기업에 대한 건물 및 토지임대 요령, 국제거래법 등을 학습하였다. 1999년 4월에는 5명의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등을 순방하면서 수력과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을 체득하였고, 농업분야 전문가 몇 명은 2000년 7월 중순부터 핀란드 트르나바 감자연구센터에서 다수확 품종 감자재배법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체재비 10만 마르카(1,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0년 1월말 호주 에너지사업 대표단을 초청,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11월에는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산업·무역장관을 초청하였다.

2001년들어 북한은 지재롱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들이 1월 말부터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방문하였고,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유럽연합 경제협력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농업과 에너지 분야 등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활동을 벌였으며 스위스-스웨덴계 산업설비 생산

업체인 '아세안 브라운 보베리(ABB)' 그룹 대표단이 1월 9일부터 1주일 간 평양을 방문,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하였다.

2월 24일 전승훈 금속기계공업상을 단장으로 한 경제대표단이 이탈리아 방문하였고, 미국의 『스탠리그룹』 초청으로 지난 2월 27일 내각의 무역성과 재정성 등 5-7명의 관리들이 방미하였다. 김봉익 무역성 부상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월 28일부터 6일간 이탈리아를 방문, 자동차, 섬유 분야에 대한 투자상담 등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 2. 북한과 EU간 관계 개선

북한은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의 수교<sup>29)</sup>를 필두로 2001년에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델란드 등 6개국과의 수교가 성사되었고 5월 14일에는 EU가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록 G7국가 중 최초로 이탈리아와 수교를 했지만 다른 EU국가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북한과 독일과의 수교 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과 EU간 수교의 의미를 고찰해 보려 한다. 북한과 독일간 수교는 여타 EU국가들과의 수교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독일과의 수교시 '파격적인'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에서 활동하는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② 원조기관이 원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지켜볼 자유 보장, ③ 북한내 독일기자의 활동편의 제공 및 원칙적으로 독일기자의 입국 허용, ④ 북한측과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 기술 비확산 문제를 망라한 군비관리 논의 등이다.<sup>30)</sup>

29) 이탈리아는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수교하려 했으나 북한이 반대하였고, 1991년 UN가입 이후에는 북한이 수교하려 했으나 이탈리아가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이탈리아가 G7국가들중 최초로 북한과 수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김일성이 1948년부터 이탈리아공산당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한 점, 이탈리아 정계의 좌파적 분위기, 1970년대 이후 수십차례 북한과 접촉한 이탈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 카를로 엘리아 발로리의 헌신적 역할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 카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후 최초로 조문한 서방인이었다. 『연합뉴스』, 2000. 1. 5.

30) 3월 2일 주한 독일대사관은 독일과 북한간의 1일자 수교를 확인하면서 4개항의 합

〈표3〉북한-서유럽(EU포함)수교현황

국 가 명	수 교 일
말 타	1971. 12. 20.
아이슬란드	1973. 5. 21.
덴마크(EU)	1973. 5. 21.
스웨덴(EU)	1973. 5. 25.
핀란드(EU)	1973. 6. 1.
노르웨이	1973. 6. 22.
오스트리아	1974. 12. 17.
스위스(EU)	1974. 12. 20.
포르투갈(EU)	1975. 4. 15.
이탈리아(EU)	2000. 1. 4.
영국(EU)	2000. 12. 12.
네델란드(EU)	2001. 1. 15.
벨기에(EU)	2001. 1. 24.
스페인(EU)	2001. 2. 7.
독일(EU)	2001. 3. 1.
룩셈부르크(EU)	2001. 3. 5.
그리스(EU)	2001. 3. 8.
프랑스(EU)	미 수 교
아일랜드(EU)	미 수 교
EU 수교결정	2001. 5. 14

\* 2001년 5월 31일 현재

상기 합의 내용은 그 동안의 북한 행태에 비추어 매우 전향적인 조치들이다. 북한이 독일과의 수교에서 전형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지만 북한과 독일간 역사적 관계와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념·정치·경제적으로 선린우호관계에 있었던 舊동독 붕괴는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북한은 통일독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통독후 최초로

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01. 3. 2.



1991년 1월 24일부터 경제무역대표단을 독일에 파견하였다. 북한대표단장은 대외무역부 부부장 김정우였으며 방문 목적은 독일당국과 수출보험재개 문제, 무역 및 경제관계 확대, 외교관계 수립 협의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핵협정 가입문제, 독일의 대남한 관계 고려 등으로 인해 북-독 수교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북한 핵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던 북한과 독일 관계는 1994년 11월 독일 기업대표단의 북한방문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구동독과 맺은 40~50개의 협정 복원과 공식수교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9년부터 백남순 외무상을 필두로 대유럽 외교에 매진하였고 동년 UN총회를 계기로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포함, 20여개국 대표들과 회담하였고 그 결과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수교하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슈뢰더(Schroeder) 독일 총리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회의 기간 중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의향을 표시하였고, 독일 정부는 북한의 수교요청을 받아들여 2001년 1월 24일 각료회의를 통해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승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과 독일은 2월 26일부터 베를린에서 김춘국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 and 독일 외무부 관계자간에 수교협상을 벌였다. 수교협상시 독일은 북한 측에 외교관 및 구호단체 요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독일의 요청을 수락, 3월 1일 수교협상이 타결되었다.<sup>31)</sup>

북한과 독일이 수교한 의도는 각각 다음과 같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정치적 의도로서 EU의 중심국가이면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독일을 활용,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시 도움을 받는 한편, 북미 수교협상시 독일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줌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앞당기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31) 북한은 3월 1일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북-독수교 사실을 보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도이쉴란드련방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은 자주성의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켜 나가며 호상관심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시켜 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1. 3. 1.

경제적 의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이후 ‘脫 중·소외교’ 차원에서 舊동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동독은 각종 경제분야에서 대북 지원을 하였다. 동독은 『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CMEA) 회원국들 중 구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었으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주된 차관제공국이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산업시설의 상당부분은 동독 기술자들에 의해 건설 또는 지원된 것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은 물론 구동독 기술자들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과 수교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통독이후 독일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관계 유지도 수교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1995년 2월 북한과 청산결거래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6년부터 평양에 티센, 지멘스, 바이멜, BASF, 메르세데스 등 17개기업이 ‘동아시아협회(OAU)’를 결성, 장기투자에 대비하고 있고, 2000년 10월에는 ‘북한-독일 기술 및 과학센터’가 설립되어, 북한 기술자들에게 선진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있다.<sup>32)</sup>

둘째, 독일의 의도는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독이후 독일은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등 EU의 중심국가로 성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양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舊동독과의 인연을 매개로 대북 투자에 대한 선점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독일은 1992년 현재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국가차관은 미국의 6천여만 달러보다 많은 1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對독일 신뢰도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월등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3)</sup>

32)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 중 EU국가로서는 독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2000년도북한의 대외무역동향』(2001. 6. 2) 참조.

33) 북-독 수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학성, “북한-독일 수교의 배경과 EU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07』(2001. 4) 참조.

## IV. 북한의 對EU관계 개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

북한은 1998년 8월 '강성대국' 건설 표방이후 적극적인 대서방 외교 특히, 對EU 관계개선에 매진하였는 바,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EU 15 개국 중 13개국과 수교함으로써 폐쇄국가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북한과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권장해 왔기 때문에 북한과 EU간 관계개선이 크게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보다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당국간 회담 재개 가능성 제고

스웨덴의 페르손(Goran Perrson) 총리는 방북후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정책 확정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겠다"라고 언급했음을 확인하였다.<sup>34)</sup>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은 EU의장국인 스웨덴 페르손 총리의 공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비록 페르손 총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태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EU-북한간 관계 개선이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남북관계는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면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입지는 악화될 것이고 특히 남한의 대북정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남한의 대북정책은 금강산관광사업이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에서 보듯이 대북지원이 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남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미국중심으로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 중국, 러시

34) 『연합뉴스』, 2001. 5. 3.

아, 일본 등 이해당사국들의 대한반도 정책도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한의 정책선택도 주변국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과 EU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은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sup>35)</sup>

물론 현재까지는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EU의 역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한반도 문제 개입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도 EU의 대한반도 정책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sup>36)</sup>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기본적으로는 대북포용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37)</sup> 이러한 이유에서 EU의 한반도정책은 남북대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2. 남북 경제협력 관계 회복 계기 부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금년들어 IT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조선컴퓨터센터(KCC)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관련 영재교육을 위해 금성 제1, 2고등중학교 및 각 지방의 제1고등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료는 물론 전주민들에게 정보기술 실력배양을

35)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은 지난 5월 28일 김중권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 방문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므로 반대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월 27일 한-러 정상회담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36) 페르손 총리도 ‘미국을 의식’하여 방북목적을 북한-EU관계 개선으로 한정하였고, 미국은 페르손 방북전에는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다 북한의 2003까지 미사일 유예 약속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5월 14일 북한-EU간 수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합뉴스』, 2001. 5. 15.

37) 현재까지 미국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환영(5.30), 북한의 TCOG 참여 허용(5.29), 페리 前대북조정관 북한과견 가능성 등 대체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독려하고 있다.<sup>38)</sup> 이와 관련 EU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북한 관료들에 대한 자본주의교육도 약속하였다. 특히 독일이나 영국 등은 이미 북한대표들에게 어학교육이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빈도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방의 최신정보 및 기술, 자본 등이 필수적인 분야로서 서방국가들의 도움없이 북한이 '자력갱생식'으로 경쟁력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EU국가들의 대북 경제지원은 남북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 각종 기술 및 자본 지원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EU의 대북지원은 국내경제 침체 및 여론의 양극화로 인해 대북 경제지원이 곤경에 처해 있는 남한에게 '국제 콘소시엄' 구성 가능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상 북한이 '불량국가'로부터 해제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대북진출도 이에 상응하여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미 '펜티엄Ⅲ급'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sup>39)</sup> 미국의 대북 기술제재가 별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IT산업 관련 남북협력이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sup>40)</sup>

### 3.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협력 증대 가능성

EU는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38)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5월 19일 “과학전, 정보전의 세기가 도래했다”면서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에게 “21세기 정보전을 위해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방송』, 2001. 5. 19.

39) 『조선신보』, 2001.5.17.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펜티엄Ⅲ' 생산 기술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 5. 18.

40) 금강산 국제그룹 회장인 박경윤씨는 남한의 『하나비즈』와 북쪽의 『평양정보센터』를 묶어 IT분야의 첫 남북합작회사인 '하나프로그래머'를 만들었음. 『한겨레신문』, 2001. 5. 21.

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에게 밀려 UN인권위원회에서 탈락되고,<sup>41)</sup> UN마약통제위원회 등에서 제외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EU가 UN이나 여타 국제기구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적 경쟁' 관계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특히 1973년 이후 남북한은 한반도내 유일 정통성 확보를 위해 UN을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거의 사생결단에 가까운 남북간 대결은 1991년 UN동시기입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완전한 의미에서 경쟁이 종식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일회적으로 1991년 남북탁구단일팀 및 청소년축구단일팀이 구성되어 좋은 결과를 낸 적은 있지만 국제정치분야나 국제경제분야에서 공동협력을 이룬 경험은 거의 없다.<sup>42)</sup>

그러나 EU의 역할 증대가 지속된다면 북한이 IMF, ADB, IBRD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용이해 질 것이고 이 경우 남한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된다.<sup>43)</sup>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북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EU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만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성공한다면 남북한간 협조관계가 증진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간 경제협력도 증대될 것이다. 경제적 비용 문제로 인해 대북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고 이를 통해 경의선 및 경원선 복원, 대북 SOC 지원 등이 달성된다면 남북연합단계 진입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41) 미국은 지난 5월 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위원회 선거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에 이어 4위를 해 서유럽 및 북미지역에 배정된 3석내에 포함되지 못했다.

42) 남북한 외무장관은 200년 7월 26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ARF외무장관회의에서 회동,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남북 재외공간의 상시협의 채널 구축, 외무장관회담 정례화 등에 합의한 바가 있다. 『연합뉴스』, 2000. 7. 26.

43)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하고 북한의 IMF 가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IMF가입 이전에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한은 가능하면 북한이 AD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고 돕고 있는 입장이다. 진념 부총리는 지난 5월 10일 제34차 ADB 연차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ADB가입을 촉구하였다. 『연합뉴스』, 2001. 5. 10.

#### 4.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필요성 등장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주로 북한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갈 것을 예상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1947년부터 '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자본주의와의 무역을 수많은 '절대적 교시'를 내렸으나 경제난 타결은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이 수령유 일지배체제 및 주체사상 고수, 인민들의 사상적 이완 우려 등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89년에 '모기장'론을 제시하였다.<sup>44)</sup> 이것은 사회주의권 붕괴가 시작된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지나친 유입으로 인해 '우리 식 사회주의' 자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그는 현재 북한변화의 중심에 서있으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IT산업 육성까지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고수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김일성과 같은 '자본주의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자들의 지원과 교류협력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적무역방법을 허용하면 사회주의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후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여러단위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가끔 자본가들과 거래하고 외화를 망탕 쓰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데로 <개혁>, <개방>이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자유화, 자본주의화될수 있습니다...누가 돈을 희사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덩석덩석 받다가는 우리의 사상과 조국까지도 팔리울수 있습니다...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은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사람이 돈맛을 들이게 되면 사상적으로 변질되기마련입니다...”<sup>45)</sup>

44) 김일성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을 관철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9년 6월 7~9일),”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2.

45)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8~11.

이외에도 김정일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용위를 강조한 대표적인 문건으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등이 있다. 이러한 문건들이 최악의 식량난이 발생하기전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sup>46)</sup> 결국 김정일의 이러한 자본주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나 EU의 중재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불신은 더욱 심화된 면도 없지 않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남한경제의 침체, 국민적 합의도 출 곤란, 미국의 자국중심의 한반도 전략 등이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란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주변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주변국의 도움은 받되 자체적으로 10년 내지 20년 후를 예상하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북한이 서유럽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말로서 ‘주체적’인 외교를 시도한 때 부터였다. 주로 서유럽국가내의 공산당이나 사회당들과의 연계이기는 하였으나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서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증오심’은 비교적 낮았다. 특히 경제발전 계획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 그리고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북한은 서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상정해 왔다.

북한이 서유럽 외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이다. 북한은 경제발전계획 달성을 위해 서유럽으로부터 차관을

46) 가장 최근의 사회주의 고수 천명은 지난 5월 27일이었다. 『조선중앙방송』, 2001. 5. 27.



도입하였고, 몇몇 국가와 정식수교도 달성하였다. 특히 그 대상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었다. 1970년대는 북한의 對비동맹외교도 활발했던 시기였고, 1975년에는 비동맹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불황과 겹쳐 서방세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방세계는 북한을 불신하게 되었고, 북한과 서유럽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경제발전을 위해 '합영법'을 채택하고 1991년에는 '제한적'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서방세계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그 이유는 북한수령체제에 대한 불신때문이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시장상실, 연속된 대홍수 등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였다. 경제적 난관은 민심동요를 유발하였고 김정일 정권 및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위기탈출을 위해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구호를 요청하는 한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고 주민들의 이동이나 상행위를 묵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단기간내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적극화하는 한편 對유럽외교에 외교역량을 집중하였다.

북한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1998년 대북포용정책을 채택한 김대중 정부가 남한에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한은 對EU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시작하였다. 1999년 9월 백남순 외무상은 UN을 무대로 유럽외교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2000년 1월 G7 국가들 중 최초로 이탈리아와 외교관계를 맺는 개가를 올렸으며 2001년에 들어서는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검증'과 '엄격한 상호주의'를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운 공화당 정권의 등장은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까지 경색시키고 있다. 지난 1월 북한을 '불량배'로 보는 정도가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큰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된 이후에나 남북관계를 고려할 것임을 내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는 5월 2~4일까지 북한과 남한을 동시 방문, 남북간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물론 현재까지는 페르손 총리의 중재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EU회원국들과 북한과의 수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EU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지만 미국도 대북포용정책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북한도 남한과의 관계개선이외에는 경제난 타결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EU의 중재는 머지않아 과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